

언론중재에 얹힌 상념들

서 정 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는 금년으로 창립 14 주년을 맞이했다. 10 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언론중재위원회도 그동안 크게 변화했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1981 년 3 월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이 기관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언론계와 진보적 학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관」으로 인식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 일반시민들도 이 기관이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탄생한 배경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당시 필자는 제 1 기 언론중재위원으로서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관변학자」로서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필자를 포함한 중재위원들을 두고 「관변인사」라는 표현으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두번째 변화는 중재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1981 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될 당시의 중재신청건수는 50 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4 년에 와서는 541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중재신청건수의 폭증에 영향을 주된 요인은 언론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향상이다. 우선 매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 · 29 당시 32 종이던 일간지가 1995 년 4 월 말 현재 138 종으로, 주간지는 201 종에서 2,676 종으로, 월간지는 1,203 종에서 3,512 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양적 증가가 첨가된다.

정치적 민주화는 언론의 자유화를 몰고왔고, 언론의 자유화는 언론의 무한경쟁시대를 초래했다. 언론의 무한경쟁시대는 불가피하게 언론의 선정주의, 언론의 폭로주의, 그리고 언론보도의 비전문성, 비윤리성, 무책임성 등을 자극하게 된다.

시민의 의식 또한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우선언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식은 「언론중심주의」로부터 「시민중심주의」로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언론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이 있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언론의 국민주권시대」라든가 「수용자 주권」과 같은 개념의 대두가 그러한 경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시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언론을 덜 두렵게 생각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주창하고 실천한다.

중재신청건수의 증가를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시민의 권리 침해가 증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추세라고 평가된다.

세번째 변화는 중재신청자의 유형이 크게 다양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서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다든가, 정부 관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다든가,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다든가, 대학교수가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론사들은 그들간에 일종의 동류의식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그러한 관행이 최근에 와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그리고 대학교수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네번째 변화는 언론사들이 시민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발전을 위해서나 언론중재위의 발전을 위해서나 대단히 바람직한 사태 진전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다. 금강산 평화의 댐사건, 김일성 사망사건, 함안 바둑이 사건, 백선장 사건, 그리고 권인숙 성고문사건 등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한번도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하는 언론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한 언론이 최근에 와서는 보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4 년에 처리된 541 건의 사례중에서 실제 정정보도율은 전체의 53%에 육박하고 있다. 순수한 불성립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국면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인들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언론의 대국민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의 지적이 있다. 언론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라는 사회적 비판도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이란 국민의 봉사기관이고, 국민이 권능을 위임한 신탁된 기관이다. 국민이 목적이고 언론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란 뜻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정보도하는 태도는 언론의 대국민 공신력을 추락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대국민공신력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의 언론다운 모습이다.

중재신청건수의 56%를 일간신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고 상존하는 현실이다. 일간지는 다른 언론매체보다도 좀더 전문성과 윤리성과 책임감을 견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침해받는 시민의 권리는 대부분 일반시민의 권리로 나타난다. 언론은 언론의 특성상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잘못된 관행」에 빠져 있다. 이러한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필자는 중재위원으로서, 언론학자로서, 그리고 일반시민으로서 문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함을 고백한다. 중재제도가 언론을 탄압하는 제도가

아니고 언론을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